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1년 2월 25일 (목)

CONTENTS

-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자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브리프  
(IB 2021-03)

---

**CONTENTS**

- I.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 1
  - II.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 12
  - III.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 22
  - IV.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 33
- 

발행인: 지상욱

편집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종인, 이윤식

편집간사: 장경수

발행일: 2021년 2월 25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이번 호(2월 4째주)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자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4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 제1편: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주요국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탈원전 올무에 갇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상위목표로 설정,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선회하고, 이용가능한 탈탄소 옵션을 망라하는 에너지믹스 구축이 필요함

## 제2편: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안보 분야에서 가장 심대한 손상을 입은 한미동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 만남에 주력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의제를 북한과의 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벌어진 폐해였음. 이에 새로운 한미동맹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 △한미동맹 의제와 남북관계 의제의 분리, △한미동맹의 신개척지 선점, △중국의 교활한 미국의 영향력 배제 속임수 등을 제안함

## 제3편: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605km<sup>2</sup> 면적에 천 만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녹지율은 8%에 불과하고, 배출되는 탄소의 대부분이 세계 최악수준의 오염원으로서 대기 중에 잔류하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 해법으로서 '효율적 녹지확보 계획(Finger Plan)'을 통해 도심 가로수의 숲 형태로 전환, 복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지하도시 건설 계획(Big dig Project)'을 통해 도시와 도로의 지하화 및 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제안함

#### **제4편: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경수 선임연구원)**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상병수당은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에서만 자체 운영중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3가지 모델을 분석해본 결과, 최소 8055억~최대 1조 77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유병시 생계에 타격이 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적용대상, 보장기간 및 상한액 결정, 제도 오남용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함

# 1.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와 우리의 에너지전환정책

작성: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jpark@dongduk.ac.kr)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기후변화는 전세계 중심 이슈로 부상. 이에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 하지만 탈원전 올무에 갇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 원자력 없이 현재 1% 내외의 비중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환상.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상위목표로 설정하고,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선회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탈탄소 옵션을 망라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함

## 1. 글로벌 이슈로서 기후변화 재조명

###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체제로 복귀 선언

#### ○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상실된 미국의 국제 리더십 회복을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미국은 서명국 중 협약에서 탈퇴한 유일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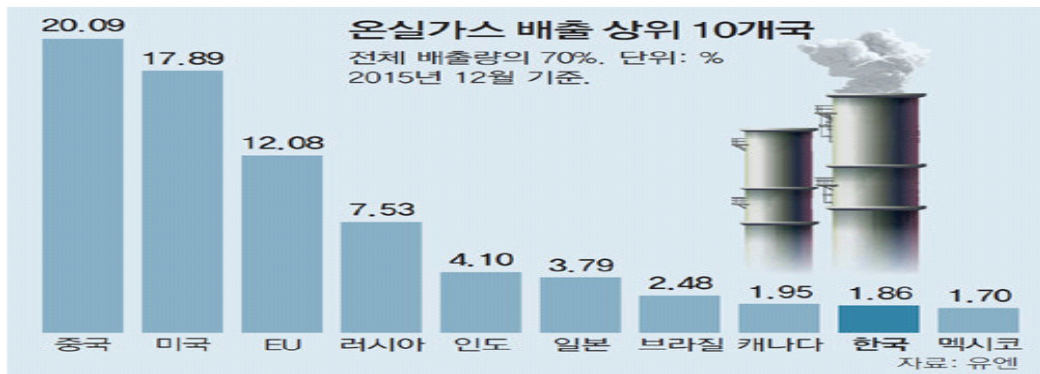
〈표 1-1〉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과정



## □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2021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로서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2020년까지 기후체제였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준 거부와 일본의 탈퇴 등으로 온실가스배출 상위 10개국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파리기후협약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협력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구축

〈그림 1-1〉 파리기후협약 체결 당시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개국



- 그러나 파리기후협약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
  - 파리 기후 협정의 국가별 감축 공약은 5년마다 수정되고 강화되어야 하나, 2020년 말까지 200여개 국가 중 70개 국가 만이 수정 공약을 제출
  -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배출량 감축목표만 제시했을 뿐 감축 방법에 대한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 2위국인 미국은 협약 탈퇴로 당연히 수정목표도 제시하지 않았음
- 일본, 러시아 등 국가도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 1-2〉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비교

	교토의정서	파리기후협약
대상 국가	• 주요 선진국 37개국	• 195개 협약 당사국
적용 시기	• 2005년~2020년	• 2021년 이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li> <li>•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li> <li>• 온실가스 감축 의무 선진국에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까지 제한</li> <li>•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매해 최소 1,000억 달러 지원</li> <li>• 2023년부터 5년마다 감축상황 보고</li> </ul>
우리 나라	• 감축의무 없음	•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따라 기후변화는 전세계 중심 이슈로 될 것이 확실시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기후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
    - 바이든은 유세 중 “파리협약의 체결에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었다.”며 “지난 4년간 세계는 협약 이행의 모멘텀을 잃었고,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은 변화하는 기후의 파괴적 효과를 느꼈다”고 언급
  -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

## 2.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탄소중립

-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를 의미하므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축 이외에는 기후변화를 방지할 방법이 없음
  - 특히, 화석에너지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온실가스의 약 80%를 차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함
- UN 산하기관인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sup>1)</sup>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경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
  - ※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포집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는 개념
- 세계 주요국들은 다음과 같이 탄소중립 목표를 잇달아 선언

〈표 1-3〉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국가	주요 내용
EU	• ‘그린딜’(2019.12)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스웨덴 등 6개국	• 탄소중립 법제화 - 스웨덴 (2017년) -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2019년) - 헝가리 (2020년)
미국	• 바이든 대통령 유세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
중국	• 과도한 석탄 의존성 탈피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10년 더 길게 목표를 잡아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202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한국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

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11월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출처: 두산백과)



### 3.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에너지전환정책

- 탄소중립은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탈탄소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해야 가능
  - 탄소중립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과 같은 소위 탈탄소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
  - 어쩔 도리 없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을 통해 땅 속에 파묻거나 나무를 심어 흡수해 상쇄해야 가능
  - 에너지 소비방법은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과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를 모두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해야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음
-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 수립중
  - (미국) 원전을 포함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저탄소 기술을 망라하여 활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전략 수립
  - (영국)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원전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여기며 에너지전환을 추진
  -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2~24%까지 높일 뿐만 아니라, 원자력 비중도 현재 6%에서 20~22%로 상향 조정하는 에너지전환을 추진
  - (중국) 최대 에너지소비국인 중국도 현재 5% 정도인 원전의 발전량 비율을 5~6배로 확대함과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

□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 조류에 역행

-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들의 에너지전환정책의 공통점은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가운데, 원자력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에너지원은 어느 것 하나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각국 사정에 맞게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구성한다는 것임
- 하지만 한국은 탈원전 정책의 오류에 갇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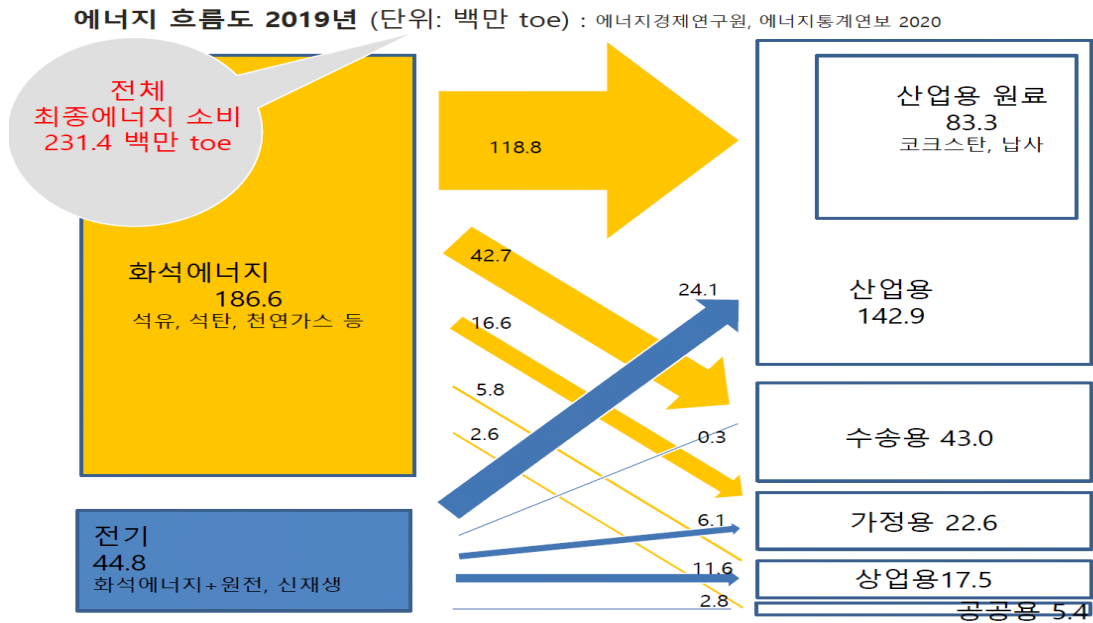
#### 4.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현실적 주요 수단

□ 원전없이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 인류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유일
- 최종에너지의 약 94%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환상
  - 우리나라는 2019년 최종에너지 소비량 약 231.4백만toe중 약 80%에 해당하는 186.6백만toe를 화석에너지의 형태로, 나머지 44.8백만toe를 전기의 형태로 소비하고 있음
  - 전기의 약 25%는 원자력으로, 6.3%는 재생에너지, 나머지 약 70%는 화석에너지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94%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셈
  - 재생에너지는 전체 최종에너지의 약 1.3%만을 감당하고 있을 뿐임

- 여기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폐기물을 제외하면 태양광, 풍력, 수력 등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더욱 낮아짐

〈그림 1-2〉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흐름도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력계통이 고립된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욱 어렵게 함

-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는 필연적으로 불규칙적인 전력수급의 과부족을 야기
- 전력계통이 고립된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과부족을 타국과의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수요조절, 에너지저장장치나 수소생산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밖에 없는데 이는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본격적인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려움

□ 이런 현실적 애로를 감안,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1) 탈원전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4개국에 불과

- 이들 4개국의 총 원전은 24기로 31개 원전 운영국의 전체 원전의 5.4%에 불과

## 2)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최초 원전을 건설 중인 국가: UAE,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 신규원전 도입 계획 중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폴란드 등

## 3) 기존 원전 운영국은 원전 이용을 확대하려는 추세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고, 혁신 원자로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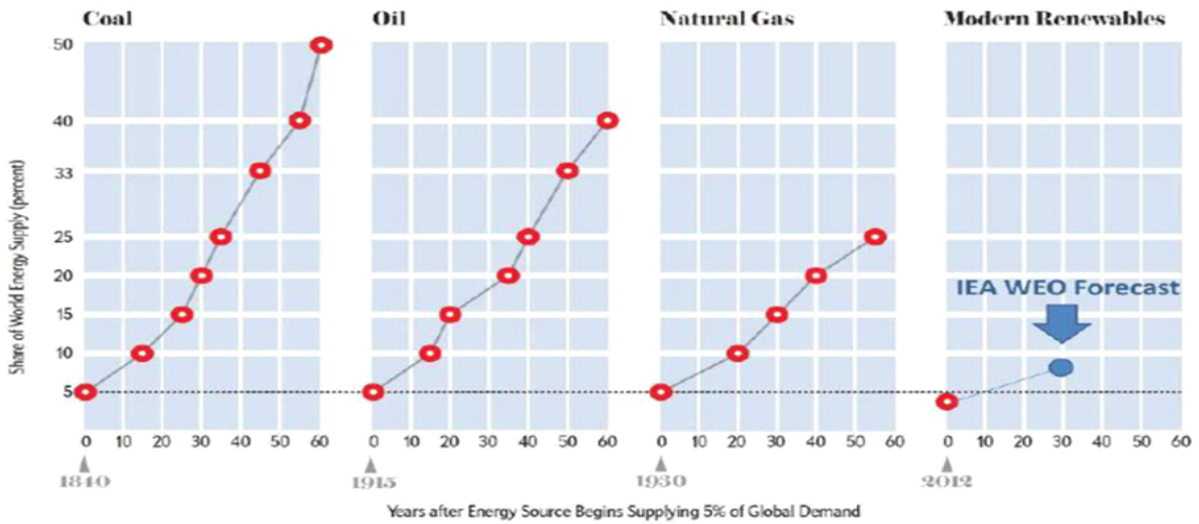
-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반원자력 입장이었으나, 2020년 8월 채택한 강령에서 ‘현존 및 진보한 원전’을 탄소중립 기술 중 하나로 명시
  - 민주당 강령에 원전 관련 긍정적 언급이 포함된 것은 1972년 이후 처음
- 바이든 대통령은 반(反)원전에서 친(親)원전으로 돌아선 케리 상원 의원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책임질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
  - “저는 1970년대부터 원자력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4세대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갑시다 (Go for it).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듭시다.” (케리 상원의원의 2017년 MIT 연설 중에서)
- 미국의 가동원전은 현재 94기로 총 전력의 약 20%, 탈탄소 전력의 55%를 생산
  - 가동 중인 원전 94기 중 50기가 40년이 넘는 원전이지만 지난 5년 동안 미국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연속 92%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기록 달성
-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보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치중

- 미국은 88기 원전의 가동기간을 1차로 60년까지 연장했고 일부 원전에 대해서는 80년 가동까지도 추진 중
- (중국)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 인정
  - 중국은 현재 14기 원전을 건설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53기 원전 건설 중) 41기 신규 원전 계획 중
  - 최근 칭화대 기후정책연구소는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믹스로 재생에너지 68%, 원자력은 19%를 제시
- (영국) 녹색 산업혁명 10대 중점계획 중 1번은 해상풍력, 2번은 저탄소 수소에 이어 3번으로 신규 및 혁신(advanced) 원전을 포함
  - 6개 부지에 1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 혹은 계획 중
- (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20~22% 달성을 확정
  - 동절기 폭설에 의한 태양광 이용률 저하와 일본 해안의 급경사 특성으로 해상풍력의 어려움이라는 현실과 에너지안보의 전통적 가치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

## 5. 결어 :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재고

-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공상(空想)
  - 미 바이든 행정부 등장으로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며 탄소중립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
  - 탄소중립은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탈탄소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대체해야 가능
    - 현재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공상적 목표
  - 세계 주요국은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탄소중립에 두고, 탈석탄 정책을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현세대 원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원전을 탈탄소 에너지의 현실적 대안으로 인정하고 있음
    -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면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음
  - 에너지전환은 100년 이상 소요되는 세기의 과제라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낙관하기 어려움
    - 에너지별로 시장점유율 5%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60년 동안 확대된 시장점유율은 석탄이 50%, 석유 40%, 천연가스 25%에 불과
    - IEA는 재생에너지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과거 에너지보다 훨씬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1-3〉 에너지별 시장점유율 확대에 필요한 시간



\*출처: Vaclav Smil(2012) and IEA WEO(2016.6)

□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탈탄소에너지정책 구축

- 탄소중립을 상위목표로 설정하고,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선회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탈탄소 옵션을 망라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함

- 기후변화는 몇 세대에 걸쳐 해결해야 할 초장기 이슈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세대가 어떤 해결책을 찾아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세대가 할 일은 미래 옵션을 늘려놓는 것임

□ 동시에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신기술 개발 노력 강화

-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쟁을 유도
- IC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의 개발에 필요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역파가 필요

※ 책임 감수: 김창배 경제정책실 실장

## II. 한미동맹 현안문제 반성과 '동맹 최적화 전략' 모색<sup>2)</sup>

작성: 이인배 외교통일정책실장 (lee.in.bae@ydi.or.kr)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안보 분야에서 가장 심대한 손상을 입은 분야가 한미동맹이라 할 수 있음. 이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의 만남에 주력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의제를 북한과의 협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벌어진 폐해였음. 이에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한미동맹 현안문제의 '정상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한미동맹 전략이 필요한 바, 수 차례에 걸친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최적화 전략'을 모색함.

### 1. 바이든 신정부의 동맹정책 전망

#### 가. 미국의 동맹정책의 우선순위는 중국

-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은 오바마 시기와 비슷할 것이다. 중국과의 긴장감이 전보다 훨씬 높으므로, 이와 연동되어 한미동맹의 역할도 재규정 될 가능성이 큼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의 청문회(1월 19일)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각각 1번에 불과했던 반면, 중국, 이란은 70여 차례 이상을 언급한 점이 보도 되기도 했음
- 북한에 대해서도 각 후보자 청문회에서 2회, 9회만 언급되는 등 한반도와 관련한 주목도가 중국, 이란보다 낮았음

2) 본 보고서는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 라운드테이블』 “4차 회의 : 한미동맹과 그 적들”(2021. 1. 29, 화상회의)에서 제시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것임



- 바이든 정부 국무부 부차관보로 발탁된 정박(Jung H. Park)은 1월 22일 브루킹스연구소에 기고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짙은 그림자”(North Korea’s long shadow on South Korea’s democracy)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
  - 정박 박사는 문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제한 조치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보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

#### 나. 더욱 폭넓은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든 정부

- 마이클 오헨론 박사(Michael E. O'Hanlon, 브루킹스연구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은 한미동맹이 주둔비용 문제와 같은 국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인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며, 새로운 이익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주문
  - 이는 지역적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태 또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
- 2020년 11월 신미국안보센터<sup>3)</sup>(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발간한 보고서 “A Blueprint for and 21st-Century U.S.-ROK Alliance Strategy”에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개척지(New Frontier)를 개시함
  - 새로운 개척지로 5G통신, 사이버 테러, 코로나19, 우주 분야,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협력 필요성 제기

---

3) 신미국안보센터는 국방장관으로도 하마평에 올랐던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미셸 플로노이(Michele Flournoy), 국방부 아태차관보로 발탁된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등이 활동했던 싱크탱크. 상기 보고서 책임자도 마크 리퍼트(Mark Lipper) 전 주한미대사였음.

## 2. 주요 한미동맹 현안 전망

### 가. 방위비 분담 문제 : 1년 혹은 다년 합의여부가 마지막 쟁점

○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트럼프식의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를 ‘한국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비판(연합뉴스 2020. 10/22 기고문)한 바 있어, 지역적인 방위비 분담 문제는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것.

○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두 가지

① 2020년 방위비 분담금 문제 : 합의하지 않고, 기한을 넘긴 2020년 방위비 분담 문제는 지난해 초에 합의한 바 있는 13% 증액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큼

② 다른 하나는 2021년 방위비 분담 문제 : 1년 기한의 합의가 될지 다년 합의가 될지에 따라 인상률 재검토 필요

- 다년 합의일 경우, 인상률도 다시금 검토해야 하는바, 지난해 합의한 바 있는 13% 인상안은 다년계약일 경우 너무 높아 한국 정부가 합의하기 어려운 수준

- 통상 물가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물가인상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난항 예상

\* 일본의 경우 미국과 주일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2021. 2. 18)

\*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09~2013년(8차 SMA), 2014~2018년(9차 SMA)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

### 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 문 대통령 임기내 현실화 난망

- 전시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의 침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
  - 지휘권(Command Authority) : 인사, 예산 등 행정 분야와 작전 분야를 모두 포괄한 결정권으로 이는 통수권 영역
  -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 행정 분야를 제외한 순수 작전 분야에 대한 지휘권으로 작전에 필요한 교육, 훈련 분야와 군사작전 분야를 포함한 권한
  -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 작전지휘권보다 더 좁은 의미로 교육·훈련 분야를 제외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 지휘구조

###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군사주권 침해다?**

**①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도 전시 작전 전반에 대한 지휘권은 양국 정상 또는 군 수뇌 간의 합의 사항**

-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휘권 중 일부가 작전지휘권이며, 작전 지휘권 중 일부가 작전통제권이며, 이것이 평시작전통제권(1994. 12. 1 한국으로 전환)과 전시작전통제권 두 가지로 나뉨. 이 중 ‘지휘권’ 이 최상위 권한
- 지휘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시에 군사작전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 (예를 들어)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해 방어하다 반격의 여건이 조성되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작전통제권 범위를 넘어선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

**② 미국 정부는 지휘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만 관여**

- 이승만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1950. 7. 14) ‘지휘권’ (Command

losure 2.

217 -1/21/52  
1 PUSAN

July 14, 1950.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CHQ, PSC, Tokyo.

Dear General MacArthur;

In view of the common military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all military forces, land, sea and air, of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or near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and in which you have been designated Supreme Commander United Nations Forces,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such command to be exercised either by you personally or by such military commander or commanders to whom you may delegate the exercise of this authority within Korea or in adjacent seas.

Authority)을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준다고 서한을 보냄.

- 이후 1978년 연합사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명시하게 되는바,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표현한 지휘권을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라는 용어로 바뀌어서, 군 지휘권에 있어서 한정된 권한만 한미연합사를 통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
- 만약 미국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하겠다고 서한에서 밝힌 ‘지휘권’ 용어를 계속 사용했을 것

○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으나, 한미간의 합의한 절차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함

-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 계획」과 「2018년 수정 1호」에 따라 ①한국군 주도 핵심군사 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필수 능력 확보,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개선 등 3가지 조건 충족이 이루어져야 함
- 이와 함께 ①1단계 기본운용능력으로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②2단계 완전운용

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③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가 마무리될 때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만 충족한 상태로 잔여 임기 내에 나머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이룩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 미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첫 번째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두 번째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2025년경에야 갖춰질 것으로 평가<sup>4)</sup>

-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현재 한미연합사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4년 넘게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충분한 전시 탄약과 한미 양국 군 간 비화(祕話)장비 호환, 피아 식별 시스템 구축 등을 끝내려면 2025년도 이르다는 게 미국의 계산

#### 다.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

○ 개념적으로 연합 ‘훈련’과 ‘연습’은 다른 데, 3월에 계획된 동맹연습은 실제 기동훈련이 아닌 모의 시뮬레이션 훈련임

- ‘연습’은 ‘한반도 위기상황’과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으로 병력이나 장비의 기동 없이 컴퓨터 기반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며 규모가 큼

- 대표적으로 (1)전반기에 실시했던 ‘키리졸브’(Key Resolve, 2008년~2018년까지 실시. ‘동맹연습’으로 명칭변경), (2)후반기에 실시했던 ‘을지

4) 『동아일보』 (2021. 2. 18.) “[단독]‘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도 미지수… 韓美동맹 새 변수”

프리덤가디언 연습(UFG, Ulchi- Freedom Guardian, 1954년~2018년 까지 실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명칭변경)

〈그림 II-1〉 주요 한·미 연합훈련 진행현황

주요 한·미 연합훈련 진행 현황		2018년	2019년	2020~2021년
▶ 기존 한·미연합 3대 훈련				
3월	키리졸브 연습	실시	연합 지휘소 훈련	• 2020년 코로나로 무기 연기 • 2021년 3월 둘째 주(9일간) ▶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4월	독수리 훈련	실시	폐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	연합 지휘소 훈련	• 2020년 8월18~28일 실시 (규모 대폭 축소) • 완전운용능력 검증(?)
▶ 연합공중훈련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대체	연기	2020년 4월20~24일 실시 (전작권 전환 훈련 위해 실시)

- 국방부를 포함한 국무부까지 트럼프 4년간 소홀히 했던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
  - 존 커비(John F. Kirby)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월 28일 주한미군의 구호인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를 거론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로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과 상의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을 조정하겠다(대통령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
  - 「9.19남북군사합의서」 자체가 잘못된 것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군사공동위'에서는 상호훈련을 '통보'하는 것이지 '협의'하는 내용 자체가 없음. 결국, 상호훈련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훈련을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됨
  -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북한은 더 큰 요구를 하고,

이 요구에 우리가 양보를 구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반발에 직면하는 악순환 초래

#### 라. 종전선언 : 사라진 이름 ‘종전선언’

- 사실 종전선언은 제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 때문에 위험한 것이었으나, 문 대통령을 제외한 당사자 즉 북한 김정은과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울 것
- 미·중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규정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종전선언도 검토할 것
  - 예전에 전작권 문제는 노태우 정부 때 동유럽 국가가 몰락했을 때 가능했던 사안임. 현재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종전선언은 미국에 관심 없는 이슈이며, 북한 역시 종전선언에 관해 관심이 없으므로 현안 이슈로 다루어지기 어려울 것
  - 집권 이후 줄기차게 거론하던 종전선언이 2021년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서부터 사라짐
- 노벨상 수상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을 때 솔깃해했으나 종전선언이 김정은의 소망이 아닌 문 대통령의 개인적 소망인 것을 파악한 후,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게 되었음

#### 마. 동맹 이슈와 중국 :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익은 누가 챙겼을까?

- 트럼프 정부 시절, 동맹 관련 핵심 사안인 한미연합훈련을 미·북한 협상 의제로 끌어들이는 국가가 중국이었음

- 중국은 (1)「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과 (2)「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기 시작했음
-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도 안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찬물을 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음
-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권으로 잠식되는 상황 발생
  - 중국 함대가 백령도 앞까지 출몰하고, 2019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공중 연합훈련 명목으로 독도까지 진출
-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황을 역이용하여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에 박차

### 3. 한미동맹 최적화를 위한 전략 제안

#### 가. 한미동맹 의제와 남북관계 의제의 분리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1월 18일)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미동맹 의제를 북한의 입장에 의해 연동될 수 있음을 시사
-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 정부가 범한 한미동맹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과오는 한미동맹 의제를 북한과의 협상 의제로 삼았다는 점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만 동맹을 평가



하는 동맹관을 비판한 바 있어, 한미동맹문제도 새롭게 재정립될 것임.  
그 핵심은 한미동맹 의제와 남북관계 의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임

- 한미동맹 관련 의제는 북한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이든 신정부와 원만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

#### 나. 한미동맹의 '신개척지'(New Frontier) 선점

- 방위비 분담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향후 미국과의 신기술 협력 분야를 넓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기반한 북핵 대응전략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안보 협력, 에너지 협력, 기후변화 협력, 5G 첨단기술 협력, 인도-태평양협력 등 5대 한미동맹 협력 분야를 선점해서 제안
  - '한미동맹 최적화 정책'으로 신개척지 분야를 제시

#### 다. 중국의 교활한 미국의 영향력 배제 속임수

-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한미연합훈련 중단 +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받아들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으나, 남은 것은 북한의 단거리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만 초래
  - 2019년 7월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
  - 2020년 12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19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
  - 최근 3년간 중국 군용기의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60회 이상
  - 2020년 12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비함이 백령도 인근 40km까지 침범

### Ⅲ. 서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도시생태재생

작성: 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이종인 수석연구위원

서울 환경문제의 핵심은 녹지의 양적 부족과 질 저하임. 605km<sup>2</sup> 면적에 천만 명이 거주하지만 녹지율은 8%에 불과하고 배출되는 탄소의 대부분이 세계 최악 수준의 오염원으로 서울의 대기 중에 잔류하는 실정. 실질적 해법으로서 '효율적 녹지확보 계획'(Finger Plan) 및 '지하도시 건설 계획'(Big Dig Project)을 제안함. 도심 가로수의 숲 형태로 전환, 복개하천의 생태복원 등을 통해 인위환경과 자연환경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도시와 도로의 지하화로 녹지를 확보해야 함. 생태환경 재생을 통한 환경 개선은 서울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도 기여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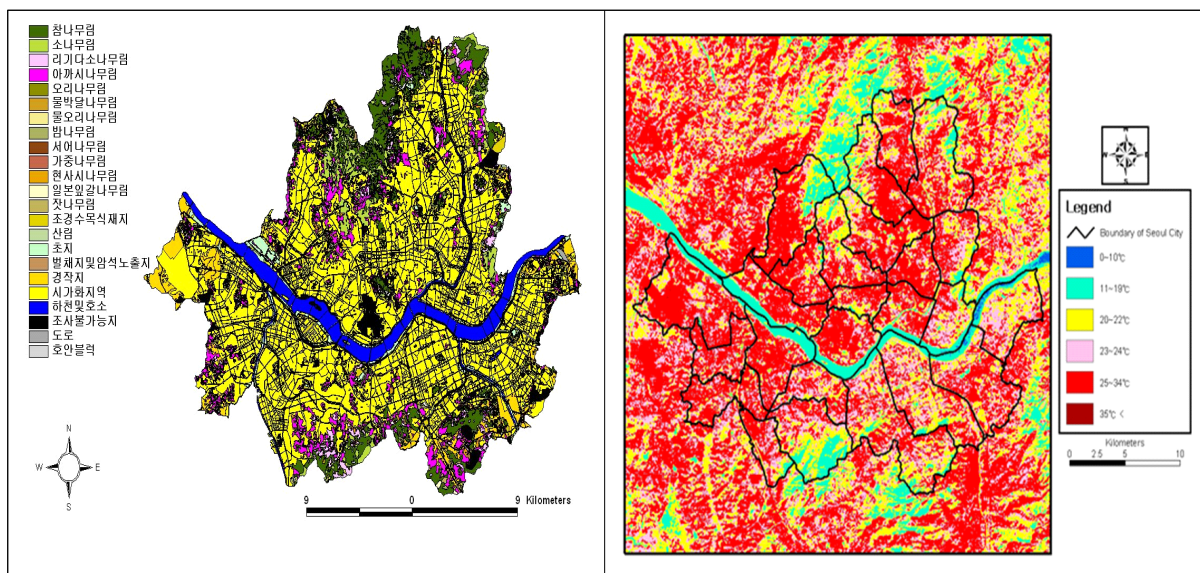
#### 1. 서울 환경문제의 현주소

- 환경문제는 환경의 기능이 파괴됨에 따라 그것의 역기능이 초래되어 생태계의 질서와 법칙을 무너뜨리는 주 인자로 정의되며, 이러한 환경 문제는 본래 환경인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충돌로부터 발생
  - 환경을 지배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생태학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발생원(pollution source)과 자연계와 같은 그것의 흡수원(sink) 사이의 기능적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
- 서울은 내사(內四)산과 외사(外四)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 분지 지형
  - 천도 당시의 도성 내는 북쪽의 북악산(342m), 동쪽의 낙산(125m), 남쪽의 남산(265m), 그리고 서쪽의 인왕산(338m), 즉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 오늘의 서울시는 천도 당시의 성곽 바깥에 위치한 산들로 한양의 방어를 튼튼히 해주었던 북쪽의 북한산(836m), 서쪽의 덕양산(125m), 남쪽의 관악산(629m), 그리고 동쪽의 용마산(348m), 즉 외사산으로 둘러싸임

○ 이러한 분지지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토지의 자연단면이 인공단면으로 전환되었고(그림Ⅲ-1좌), 그 결과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 지역과 비교해 크게 높아지는 열섬현상 발생(그림Ⅲ-1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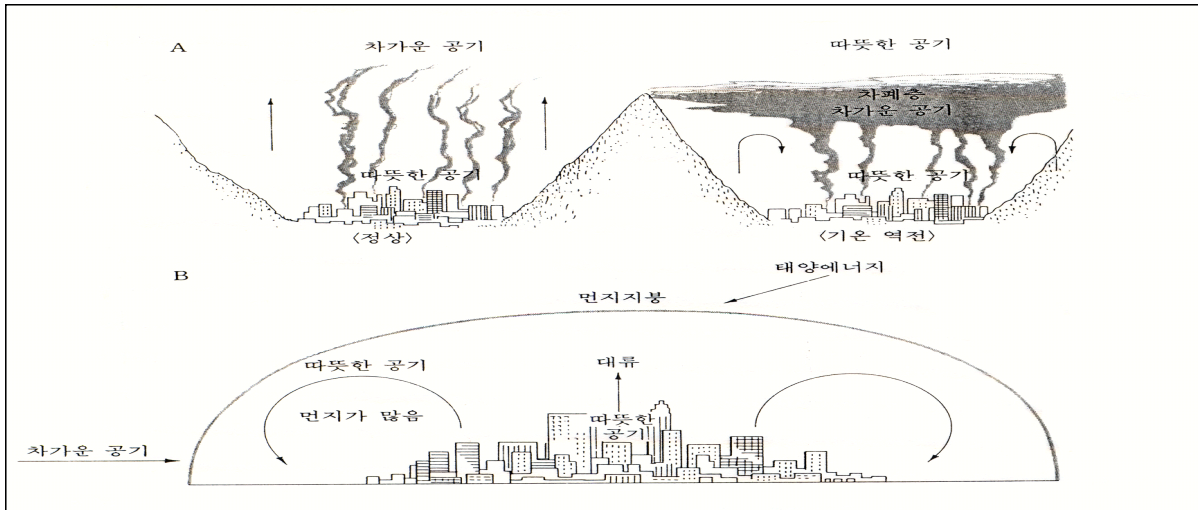
〈그림 Ⅲ-1〉 인위환경·자연환경의 공간분포(좌) 및 서울·수도권의 온도 분포(우)



- 인공단면과 그곳에 더해진 수많은 인공구조물들은 주변 공기와 비교해 밀도가 높아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오래 보유할 수 있음

- 해가 지고 공기가 식으면 이러한 인공단면과 구조물이 보유하고 있던 열이 주변으로 확산되며, 이렇게 발생한 열을 간직한 공기덩어리가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상승하여 일정 높이에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른 기온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온이 상승하는 기온 역전층이 형성됨
- 이렇게 형성된 기온 역전층은 공기의 수직 혼합을 저해하여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그 안에 가두며 오염현상을 악화시키는데, 서울과 같은 분지지형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특히 크게 작용함

## <그림 III-2> 도시지역 기온 역전층 및 미기류에 의한 공기이동 모식도



- 서울은 605km<sup>2</sup>의 면적에 약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세계적인 대도시이지만 녹지율은 8%에 불과한 실정
  - 서울의 녹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¼가량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지역에 자리 잡고 있음
    - 인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의 흡수원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크지 않음
    -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흡수원 사이의 차이가 크고,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각종 환경문제로 나타남
- 서울은 탄소 발생량의 1.5% 정도만 숲이 흡수하고 나머지 98.5%는 대기 중에 잔류
  - 1,000만 인구가 생활하며 배출하는 서울의 탄소배출량은 약 1,300만 톤이며, 서울에 성립한 숲이 흡수하는 양은 서울의 경계를 벗어나는 주변의 그린벨트 숲까지 포함해도 20만 톤에 미치지 못함
    - 대기 중 잔류 탄소의 수명은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양은 계속 쌓여가며, 서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양을 크게 초과
  - 그 결과 서울의 기온이 주변 자연지역보다 평균 5℃ 가량 높으며,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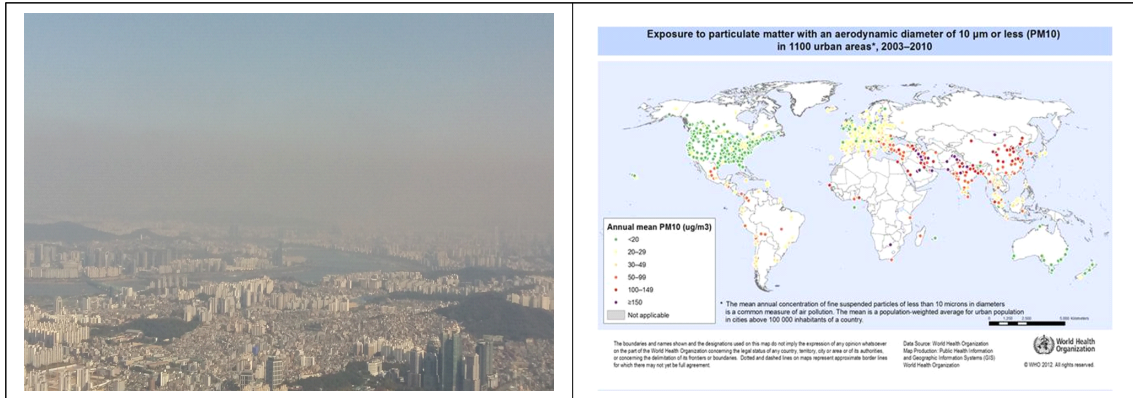
지리적으로 비교하면 위도 5° 정도의 차이로 우리의 국토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

-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평균 기온 상승치로 계산하면, 기후변화가 700년가량 앞서가는 것이며, 우리나라 평균기온 상승치로 계산해도 200년 이상 기후변화의 진행이 선행하는 것임
- 식물의 반응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음. 벚꽃의 개화일이 최근 100년간 2주가량 빨라졌는데, 서울의 도심과 외곽 사이에도 1주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기 중 잔류 오염물질의 실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및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이 잘 보여주고 있음

- 서울 도심의 토양 pH는 정상치인 5.5보다 2 정도 높으며, 수소이온농도로는 100배가량 차이
  - 반면에 서울 외곽의 토양 pH는 정상치와 비교해 1.5가량 낮으며, 수소이온농도로는 수십 배 높은 값임
- 그 영향을 온대 숲의 전형적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서울의 숲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온대 숲은 큰 키 나무 (교목), 중간 키 나무 (아교목), 작은 키 나무 (관목) 그리고 풀들 (초본)이 각각 층을 이루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러나 서울의 숲은 중간 키 나무 층의 식피율이 크게 늘어나며 작은 키 나무와 풀들이 이루는 층에 압력을 가해 그 층이 쇠퇴하며 숲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있으며, 출현하는 식물의 종류가 크게 감소
  - 이는 산림생태계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그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임

### 〈그림 III-3〉 서울의 미세먼지 실태(좌) 및 세계 미세먼지 오염지도(세계보건기구,우)



○ 서울 시민의 생존에 필수인 산소량의 변화를 통해서도 서울의 환경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1 ha의 숲이 내놓는 산소량은 45인의 연간 호흡에 필요한 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의 녹지는 자연 상태의 숲과 조림지는 물론 초지와 농경지 까지 포함시킬 때 그 면적이 20,000 ha 수준에 불과
- 이러한 녹지를 모두 성숙한 숲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더라도 그것이 공급 하는 산소량은 서울 인구의 1/10에도 못 미치는 90만 명 정도만 호흡 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함

## 2. 서울 환경문제의 주요 배경

□ 환경문제의 핵심은 오염물질 발생원과 흡수원간 심각한 불균형

- 이는 녹지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그것이 불균등하게 분포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유발의 핵심
- 녹지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위적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

- 인위적 공간이 환경스트레스의 발생원(source)이고, 도시 숲과 같은 자연이 그것의 흡수원(sink)임을 고려하면, 양자 사이의 불균형은 우리 생활환경에 많은 환경스트레스를 남겨둔다는 의미
- 서울의 대기오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기온역전층의 형성도 매질의 밀도가 높은 인공구조물이 주변의 공기보다 오랫동안 간직하였던 열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녹지 부족현상에 기인함
  - 기온역전 상태에서 대기는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공기의 수직 혼합을 억제하게 됨
    - 이러한 상태에서 도시 주변의 전원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주변의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가벼운 오염물질 덩어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며 기온역전층 하에서 미 기류를 형성함(그림 III-2 참조)
    - 그러한 상태에서 이 미기류는 순환을 하며 도시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동시켜 숲의 최상층을 이루고 있는 신갈나무 등에 스트레스를 가하게 됨
    - 이러한 스트레스로 신갈나무의 활력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하는 팔배나무가 번성하며 퇴행 천이와 비정상적인 숲의 구조를 유발하는 것임
- 대기오염물질에 더하여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역시 녹지 부족현상으로 발생하는 열섬현상 (heat island effect)임
  - 서울과 같은 분지 지형에서 발생하는 열섬현상이 도시의 기온을 높이면 이는 증발산량을 높여 수분부족을 유발하게 됨
    - 이 경우에도 팔배나무와 같은 천이 초기 종은 신갈나무와 같은 후기 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그러한 현상이 가속되는 것임
- 종합하면, 녹지의 양적 부족과 질 저하로 발생한 환경문제가 녹지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며 서울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문제는 이미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서울에서 새로운 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 악화일로의 서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그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임
    - 특히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은 흡수원 외 생태자원의 공급,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증진, 심미적 안정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s)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UN에서도 이를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음의 녹지 확보 계획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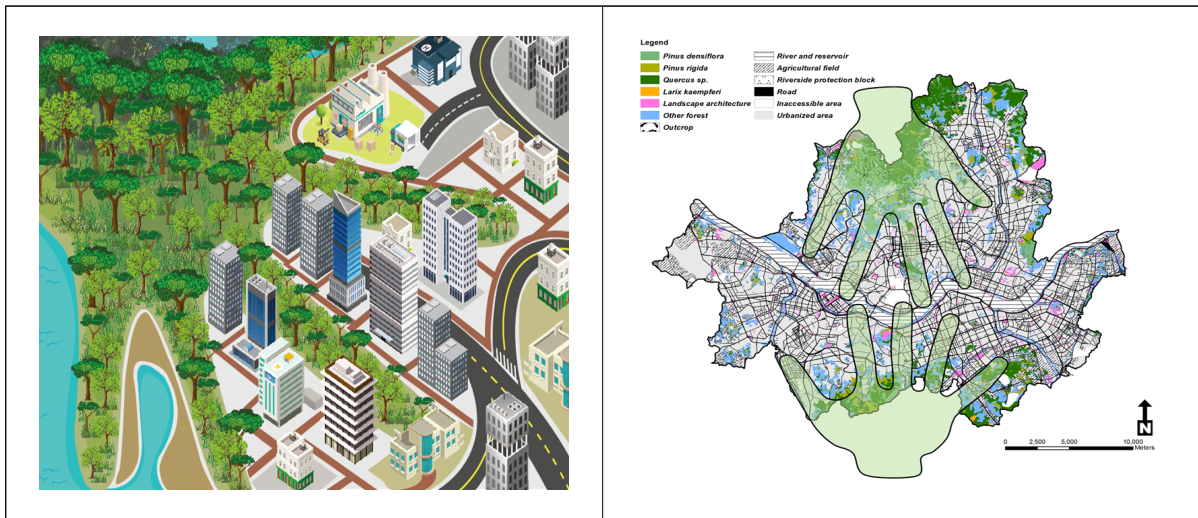
### 3. 생태재생을 통한 해법 - Finger Plan과 Big Dig Project

#### ① 효율적인 녹지 확보 계획 : Finger Plan

- Finger Plan은 본래 194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의 한 유형임
  - 당시 Finger Plan은 손바닥에 해당하는 도심을 중심으로 삼고, 자연이 바탕을 이룬 지역에서 효율적인 개발을 이루어내기 위해 철도나 도로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손가락을 펼친 것처럼 개발을 이루어내는 계획



### 〈그림 III-4〉 Finger Plan의 예시



주: 손바닥 부분은 그린벨트 또는 거점 녹지. 개발지 사이로 손가락 모양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오염 발생원과 흡수원 사이의 기능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계획(좌). 육상의 그린벨트로 부터 도심을 거쳐 하천에 이르는 녹지축 확보 계획(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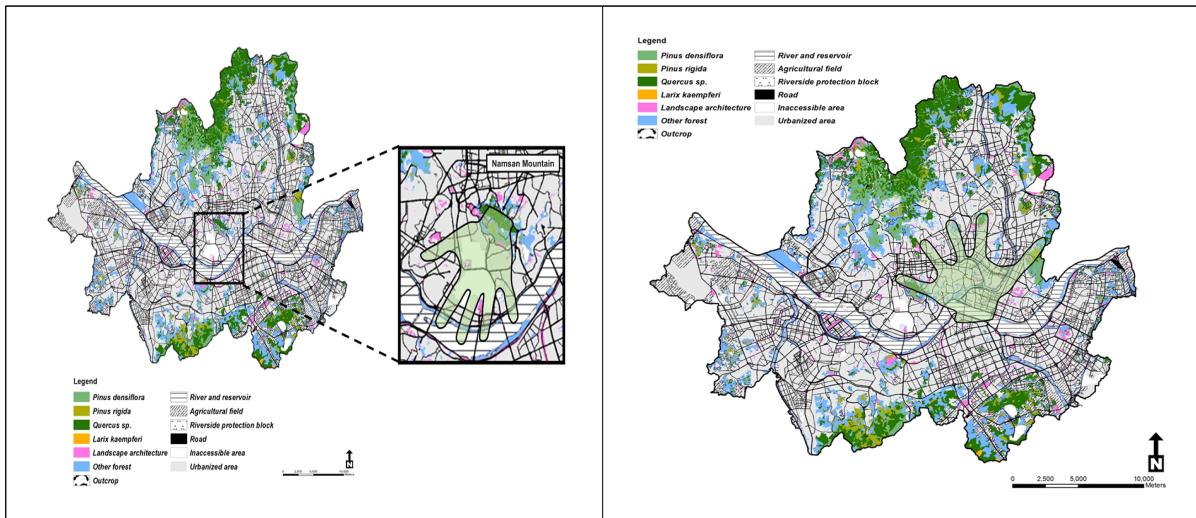
○ 서울의 Finger Plan은 원래 계획과 반대 개념으로 적용되는 역발상임

- 개발지 사이에 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손바닥에 해당하는 그린벨트 또는 거점 녹지로부터 개발지 사이로 손가락 모양의 띠형 녹지를 이루어내는 계획임

○ 실제로 서울 도심에는 거점 녹지들이 있으며, 아파트 정원과 같은 점 녹지들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Finger Plan이 충분히 가능함

- 가로수를 숲 형태로 다듬고 청계천과 같이 복개하천을 복원하여 이들을 연결하여 인위환경과 자연환경간 균형을 회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Finger Plan의 주 목적
- 거점 녹지와 더불어서, 하천과 육상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확보도 바람직함

## 〈그림 III-5〉 Finger Plan 활용 계획(좌) 및 녹지축 확보 계획(남산의 사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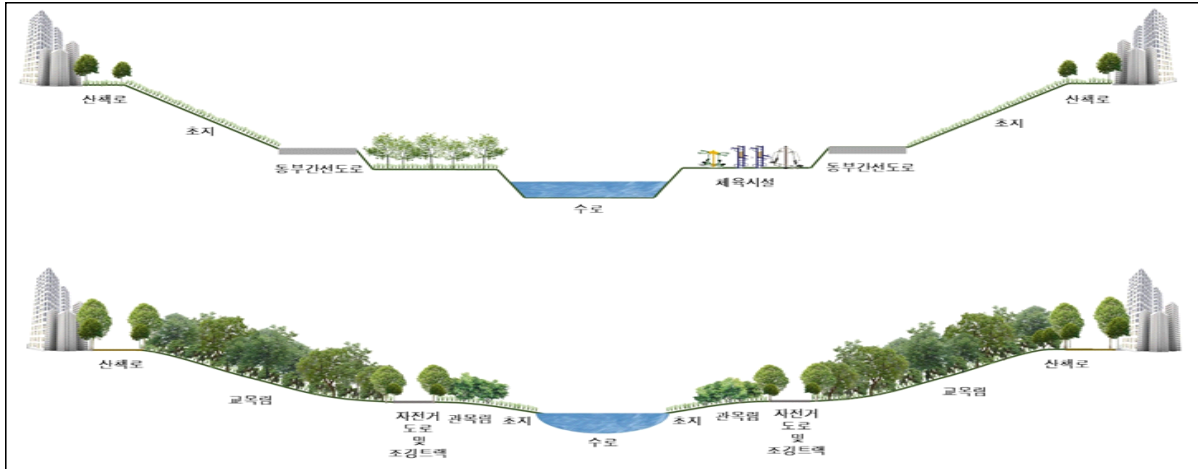


### ② 지하도시 건설 계획 : Big Dig Project

○ 공간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서는 Big Dig Plan을 활용하여 녹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예컨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옮긴 후 도로구간을 중랑천과 함께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
-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울 도심의 기온을 1℃ 가량 낮출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은 기온역전층 형성 완화에도 기여해 오염물질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복원을 통해 이 하천에 도입될 식물은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이 높아 전 구간 복원 시 서울시 주변 그린벨트 전체가 발휘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8.7% 가량을 흡수하며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가 가능함
- 하수도 수준의 도림천과 그 주변을 이러한 Finger Plan과 연결하여 생태적으로 복원·재생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함
  - 녹지가 크게 부족한 이 지역에 다양한 크기의 쌈지공원을 조성해 복원된 도림천과 쌈지공원들을 Finger plan으로 연결하여 서남권 서울의 환경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Ⅲ-6〉 중랑천의 현재 모습 (상)과 미래 모습 (하)



〈그림 Ⅲ-7〉 도시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에 녹지를 확보한 미국 보스턴시(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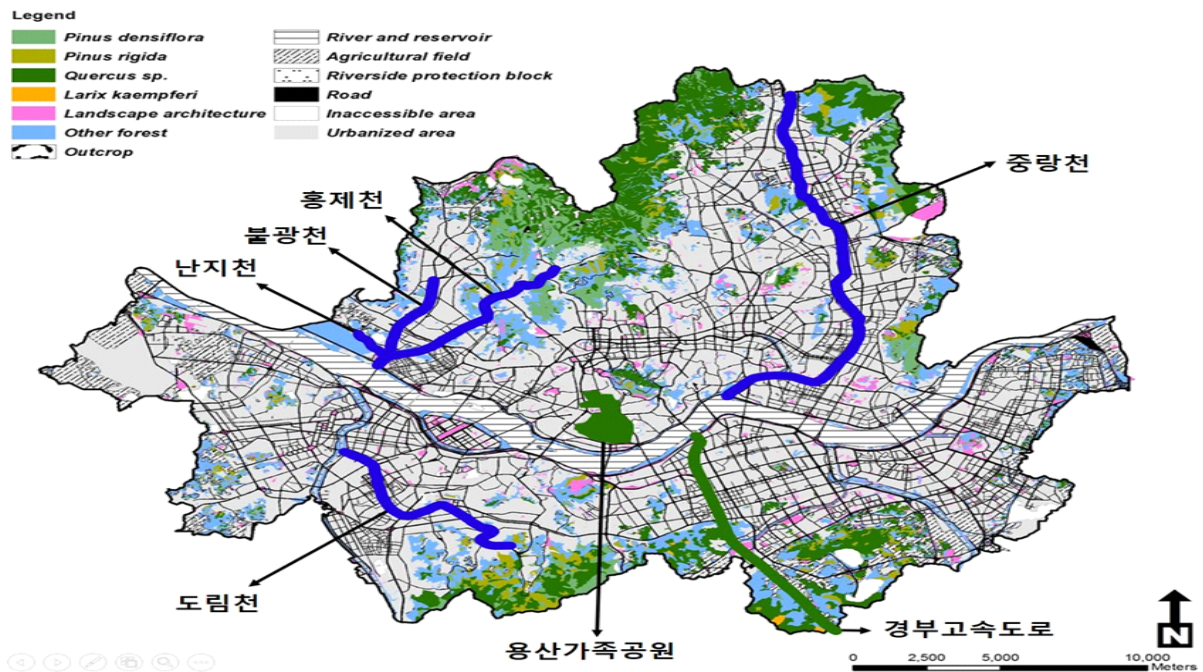
주: U Plan(좌, 본래 Big Dig Plan으로 불림)과 건물 녹화(우)로 흡수원을 추가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3 Finger Plan 및 Big Dig Project를 서울 환경문제에 적용

-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Finger Plan 및 Big Dig Project이라는 도시재생계획 개념을 서울 환경문제의 해법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다양한 계획의 실현을 통해 서울이 명실상부한 생태 재생도시로 거듭날 뿐 아니라 각종 환경문제의 해소 및 쾌적한 도시로의 재탄생이 가능해짐

- 경부고속도로 구간부터 한남대교까지의 구간의 지하화 및 생태통로형 공원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 생태공원 조성
  - 용산가족공원의 생태공원화로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도심 생태공원 조성
  - 도림천 복원 및 다양한 규모의 쌈지공원 조성으로 서남권 생태도시 창조
  - 난지천, 불광천 및 홍제천의 생태복원으로 서북권 생태도시 창조
- 이러한 도시재생계획은 청계천 복원 시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키며 도시 환경개선의 세계적 모델로 등장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임

〈그림 III-8〉 서울의 Finger Plan 및 Big Dig Plan 적용 대상



## IV.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점과 개선방향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jang.gyeong.su@ydi.or.kr)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상병수당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문제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에서만 자체 운영중.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직전 평균 소득의 일정비율(50~100%)을 정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3가지 모델을 분석해본 결과, 최소 8055억 ~ 최대 1조 7718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 모델별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소요 예산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모델1 수준으로 도입하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유병시 생계에 타격이 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 나아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적용대상, 보장기간 및 상한액을 명확히 정하고, 제도 오남용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함

### 1. 상병수당 도입을 둘러싼 논의

-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할 때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음
  - 이낙연 당대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2.2)에서 신복지제도의 구상을 발표하며 상병수당 도입 논란 재점화
  - 지난해 7월에도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만으로 한정해 상병수당은 제외

-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시 산재보험급여, 휴업시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업무외 상병은 사업장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각각
    - 일부 대기업은 유급병가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급병가임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유급병가와 유급휴직이 보장되고,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병가를 보장

〈표 IV-1〉 상병 발생 원인별 보상제도

구분		상병수당	장애연금
업무상 상병	산업재해	휴업급여(2년 이내),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공무원	유급병가(6개월), 유급휴직(3년)	장애연금, 장해보상금
업무 외 상병	일반인	임의 기업 복지	장애연금
	공무원	유급병가(60일), 유급휴직(1년)	장애연금, 비공무원장애연금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도입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
  - 이에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모델 설계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2. 상병수당 도입의 명암(明暗)과 해외사례

### □ 상병수당 도입의 명암(明暗)

#### ○ 상병수당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받을 기회 보장

- 질병 재발의 위험을 줄이고, 회복 후 정상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일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을 보장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
- 상병수당의 긍정적인 효과는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 근로자나 저임금근로자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

#### ○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직장 내 집단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 ○ 그러나 상병수당 도입은 문재인케어가 진행중인 현 시점에 재원 확보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 또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가능

- 이에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뒤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대기기간을 두고 있음

※ 뉴욕시 사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유급병가가 도입된 뒤 병가 신청이 11% 증가한 결과 나타남

### □ 상병수당을 도입한 해외사례

○ 해외 상당수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OECD 36개 회원국 중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4개국뿐
- 한국을 제외한 3개국은 직간접적으로 근로자가 아프면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기업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무급이지만 병가를 보장, 유급병가도 확대 추세

〈표 IV-2〉 상병수당 도입한 주요 OECD 국가

국가	의료보장	상병수당	제도 대상	보장 방식
호주	조세	조세	18세 이상	정액 / 월 최대 91만원
덴마크	조세	조세	직장, 지역	정액 / 월 최대 290만원
슬로바키아	조세	상병	직장, 지역 ≤10세 자녀	정률 / 소득 55%
스웨덴	조세	상병	직장, 지역	정률 / 소득 80%
터키	조세	상병	직장, 지역	정률 / 소득 66.7%
독일	건보	건보	직장, 지역 ≤12세 자녀	정률 / 소득 70%
프랑스	건보	건보	직장, 지역	정률 / 소득 50%
핀란드	건보	상병	직장, 지역	정액 / 저소득 월 124만원 정률 / 소득 70%
체코	건보	상병	직장, 지역	정률 / 저소득자 90%, 고소득자 30%
일본	건보	건보	직장	정률 / 66.7%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의 상병수당 운영형태를 보면 사회 보험방식이 96개국, 조세방식 4개국, 혼용 5개국, 고용주 부담 58개국임



- 사회보험방식은 건강보험에 속해 있거나 건강보험과 함께 관리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 상병수당과 출산수당만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스웨덴, 슬로바키아, 터키), 상병수당만 보장하는 사회보험방식(이탈리아)도 존재
- 대부분의 국가는 직전 일정기간 평균 소득의 일정비율(50~100%)을 지급하는(70일~무제한) 정률 방식으로 운영
  - 일본은 66.7% 정률로 18개월 동안 지급, 스웨덴은 80% 정률로 직장가입자는 최대 364일/지역가입자는 90일동안 지급, 슬로바키아는 90% 정률로 무제한 지급임
  - 정액으로 지급하는 덴마크는 월 최대 290만원, 호주는 91만원 수준(원화 환산)

### 3. 상병수당 모델별 시나리오 분석

- OECD 국가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적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지급대상, 보장기간, 보장방식, 보장수준 등의 기준을 달리하여 3가지 도입모델<sup>5)</sup>을 설계할 수 있음
  - **(모델1)**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3일 초과 근로자에게 법정유급병가 및 대기기간 7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
  - **(모델2)** 병원급 이상 입원+외래 3일 초과 근로자에게 법정유급병가 및

5)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20), '한국의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논의를 위한 보장기준설계 및 소요 재정분석'

대기기간 3일 초과~180일(혹은 360일)까지 정률방식(소득 50% 혹은 66.7%)으로 보장하되 직장근로자 평균소득의 30%하한과 100%상한기준으로 보장

- (모델3) 모델2의 근로자+근로자의 3세 이하 자녀 1인당 10일까지 부모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

○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병수당 도입모델에 따라 최소 8055억 ~ 최대 1조 7718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표 IV-3〉 상병수당 도입모델 시나리오

	모델1	모델2	모델3
예상인원	109만명	165만명	264만명
소요예산	8055 ~ 9209억원	1조 1172억 ~ 1조 2276억원	1조 5255억 ~ 1조 7718억원
대상	입원+내원일수 3일 초과자	입원+내원일수 3일 초과자	근로자 본인은 모델2 적용, 3세 이하 자녀가 아플 때도 적용
기간	법정유급휴가대기기간 7일 초과시점부터 ~180일(360일)까지	법정유급휴가대기기간 3일 초과시점부터 ~180일(360일)까지	자녀 1인당 10일까지 부모와 동일 기준
급여	소득의 50~66.7% 보장	소득의 50~66.7% 보장	소득의 50~66.7% 보장

자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소득 50%보장과 66.7% 보장은 약 1천억원의 차이가 예상되지만, 보장기간 180일과 360일의 차이는 거의 없음

- 모델2는 모델1보다 약 3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 모델3은 모델2보다 약 4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 예상

※ 이 시나리오에서는 산업체간 격차와 영세사업주의 형편을 고려해 최소의 법정유급 병가기간을 설정했으나, 모델1에서 유급병가 7일에 대한 고용주 부담도 약 3천 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을 100% 국고 지원으로 해결하자고 주장
  - 이는 상식적으로 보험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하는데 민감한 보험료 인상에는 눈감고 정부 재정 투입만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주장임
- 전문가들도 ‘보험료를 일정 금액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 교수 *“상병수당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문제는 재원. 건강보험 재정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고지원금은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건 어려운 일인 만큼 결국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4. 정책 제언

### □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상병수당은 업무외 부상·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유병시 생계에 타격이 큰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 검토
  - 적용대상 및 기준 측면에서 업무외 부상·질병에 의한 근로능력상실이 명확히 의료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 도입시 재원 마련을 건강보험료 인상 방식으로 할지, 별도의 사회보험을 신설해 보험료 부과 방식으로 할지 국회 차원의 검토 및 합의가 필요
  - 재정부담을 100% 국고보조로 하자는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의 주장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

- 시나리오의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모델1 수준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

## □ 개선과제

### ○ 우선 적용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일반근로자에게는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지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사립학교 교원은 유급병가가 보장됨
- 따라서 이들의 중복 수혜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

### ○ 상한액과 최대 보장기간 명확히 정할 필요

- 현재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병수당 금액을 소득에 비례해 산정 하되 하한액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했지만, 상한액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 또한 상병수당 최대 보장기간은 OECD 국가별로 상이하나, 대개 6개월 이상 보장하는 추세도 고려할 필요

### ○ 제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상병에 의한 근로능력상실을 증명해야만 제도 자격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적 인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도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
- OECD 국가들은 상병수당 의료인증을 하는 의사와 병원을 지정하여 상병수당 관련 진단서를 발급하고,공단 등 상병수당 운영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근로능력상실이 발생한 게 맞는지, 무능력기간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

## ※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현황

- 상병수당은 현재 여당 중심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모두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그 기간만큼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표 IV-4〉 상병수당 도입 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자	법안	주요 내용	진행상태
박광온(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07906)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소관위 접수
정춘숙(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07512)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소관위 접수
박범계(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06391)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	소관위 접수
배진교(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100695)	상병수당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반영하여 소득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	소관위 심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1.2.22. 현재)

##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9~現在)

### 이슈브리프 2021-02 (발간일: 2020.2.4)

- ▶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본 미국의 한반도/대북정책 전망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 ▶ 지난 10년간 서울시 정책 실패 사례 분석

### 이슈브리프 2021-01 (발간일: 2020.1.14)

- ▶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 현황, 평가, 전망 ▶ 인구감소시대의 정책 대전환 방향
- ▶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20-16 (발간일: 2020.12.24)

-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이슈브리프 2020-15 (발간일: 2020.12.10)

- ▶ 서울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니즈와 시사점 ▶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과 과제

### 이슈브리프 2020-14 (발간일: 2020.11.28)

- ▶ 해외 석학들이 본 바이든 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 스타트업 해외 성공사례 분석 및 시사점
- ▶ 음식배달 라이더 현황 및 업계 건의 사항

### 이슈브리프 2020-13 (발간일: 2020.11.12)

- ▶ 2020 美 대선 결과분석: 평가, 전망, 대응 ▶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 ▶ 임대차2법發 전월세대란: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 이슈브리프 2020-12 (발간일: 2020.10.29)

- ▶ 노동시장 관련 최근 논점과 개혁방향 ▶ 정당성을 상실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관광업계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11 (발간일: 2020.10.15)

- ▶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 북한 암호화폐 절취 실태와 정부 대응의 문제점
- ▶ 부동산 과세 강화의 문제점 진단 및 시사점 ▶ 초고령사회 대비 주택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방안

### 이슈브리프 2020-10 (발간일: 2020.9.28)

- ▶ 전월세전환율 2.5% 강제 인하의 타당성 검토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유통정책 제언
- ▶ 포털 SI알고리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9 (발간일: 2020.9.17)

- ▶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와 정책방향 ▶ 코로나19, 중소기업 생존·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 ▶ 코로나19, 국내외 육아보육 정책 검토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8 (발간일: 2020.8.13)

- ▶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 60%로 제도화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일가정양립정책' 방향
- ▶ 아동학대범죄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이슈브리프 2020-07 (발간일: 2020.7.23)

-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 ▶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보기”
-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반’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펄스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8)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수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5가지 이유
-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